

##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한 대국회 서신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엄중합니다.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결단과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 설 곳도, 피해 갈 방법도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기회를 정치자금 투명화와 현실화를 이루는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저비용 정치, 투명한 정치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정치자금법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 문제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은 투명한 정치, 국민참여 정치와 더불어 당면한 정치개혁의 3대 과제이며, 그중 가장 핵심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가 해결해

야 할 최대 숙제입니다. 이 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정치가 개혁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역구도로 인해 우리 정치는 건전한 정책대결이 아닌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선거유세는 물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상대 당에 대한 감정적 발언들을 쏟아내야 지역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뿌리내릴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초당적 협력', '상생의 정치' 를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해 왔습니다. 모두들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겠지만 어느 국회의원도 이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일 내년 17대 총선도 현재와 같은 지역구도로 치러진다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은 또다시 4년 동안 대결정치, 소모적 정쟁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도, 국민통합도, 2만 달러 시대로의 도약도 어렵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해소되어 17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된다면 세계 비판적인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도 상관 없습니다. 넓은 지역대결 구도만 해체되면 국회와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얼마든지 생산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는 길게는 수십년, 가까이는 지난 십수년간 한국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선거구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

선거구제를 고수한다면 특정지역, 특히 영·호남에서 하나의 정당이 의석수를 대부분 차지하는 기형적 결과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유권자들도 지역주의 정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십수년간 뿌리내린 지역정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의 정당만을 고르라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거구제가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습니다. 고비용 문제는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선거공영제도,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의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 길이 정도입니다.

지역대표성이 필요한 농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로 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크지 않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로 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를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농촌과 소도시의 지역대표성도 유지하고 지역구도 해소라는 취지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 이유로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은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극복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중앙무대, 사실상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의 독무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 지역에서 여러 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차지하는 기형적인 구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분권과 지방화의 대세에도 맞는 길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2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 봐야 실질적인 지역구도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보다 의

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지구구 의석수를 줄이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2~4개의 자치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어 지역대표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대표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소외되어 가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원 정수는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교할 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입니다. 국회의원 200여명의 소모적 정치공방에 발목 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하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덧붙여 지구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각 정당간의 협의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지구당 폐지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구당이 고비용 정치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당은 국민들이 정당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정당정치의 주춧돌입니다. 참여민주주의의 확대가 시대의 추세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구당을 폐지하기보다는 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당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운영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꾸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발상을 달리하면 사무실을 두지 않아도 지구당 조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별도의 장소를 정해 각자 비용을 부담해 일상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의 장점을 살려 인터넷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당에서 돈을 들여 당원들 모임과 행사를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원들이 스스로 비용을 내면서 모임을 운영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구당을 만들어 간다면 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호소합니다. 제도를 바꾸는 일은 개별 의원들과 정당들의 현실적 이해가 걸려 있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의 타파 문제만은 당리당략이나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털어 버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심사숙고해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욕먹는 정치, 자식에게까지 부끄러운 정치, 정치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정치에서 이제 함께 해방됩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정치 질서만 타파될 수 있다면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비롯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16대 국회가 한국 현대정치사의 숙원인 지역구도 타파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